

			
			
	<p>2014년</p> <p>여성가족위원회</p> <p>국정감사</p> <p>언론보도 기사모음</p>		
			
			
			
			
			
			
			
			
			

목 차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07-03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3	SBS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3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매년 급증
2014-07-03	머니투데이	"아동·청소년 노린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급증"
2014-07-03	아주경제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3	여성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9	조선일보	[人事청문회]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改名 추진"
2014-08-19	문화일보	울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사망
2014-08-19	연합뉴스	이자스민 "울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YTN	이자스민 "울 상반기 아동학대 9명 숨져"
2014-08-19	KBS	"울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뉴시스	이자스민 "울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연합뉴스TV	이자스민 "울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20	세계일보	피지도 못하고... 아동 학대로 상반기 9명 숨져
2014-08-22	문화일보	휴가철 안전사고·성범죄 '해수욕장' 무방비로 노출
2014-08-26	연합뉴스	"무좀 환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2014-08-26	뉴시스	무좀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2014-08-26	동아일보	"무좀 환자, 남성보다 여성이 7만3000명 더 많다"
2014-08-27	머니투데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2014-08-27	아시아일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공개 의무화 추진
2014-09-15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교육기관 성희롱 매년 증가"
2014-09-15	아시아투데이	이자스민 의원 "교육기관 성희롱 매년 증가 추세"
2014-09-16	머니투데이	"해외 성매매 딜미 '어글리 코리안', 작년만 500여명"
2014-09-16	내일신문	학교내 성희롱 문제 심각
2014-09-17	머니투데이	이자스민 "이주여성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사용" 추진
2014-09-30	문화일보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 범죄라고 인지해야"
2014-10-04	세계일보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14-10-10	헤럴드경제	가족친화인증제도, 유명무실...강원·울산 인증받은 공공기관 0개
2014-10-10	뉴시스	[국감브리핑]가족친화인증, 대상 기업·기관 0.02% 그쳐
2014-10-14	문화일보	장애인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2년새 위반 과태료 부과 4.3배
2014-10-21	뉴시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매년 증가...지난해 과태료 2억
2014-10-22	에코저널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 안전 '비상'
2014-10-22	내일신문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원 5곳중 4곳 안전에 문제
2014-10-23	헤럴드경제	"사장님 나빠요~"~외국인 여성 근로자 성폭력·성희롱하는 가해자 88.9%는 '사장님'
2014-10-23	여성신문	외국인 여성 성희롱·성폭력 88.9%, 가해자는 '사장님'
2014-10-27	뉴시스	[국감브리핑]청소년문화의집,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 평가
2014-10-28	헤럴드경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학교밖 청소년상담사 이직 잦다
2014-10-29	연합뉴스	이자스민 "다문화센터 통합, 법·제도 정비 선행돼야"
2014-10-29	메디컬투데이	해외 성매매 검거...1년 새 81% 급증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천898건, 2012년 8천874건, 2013년 9천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습니다.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천898건, 2012년 8천874건, 2013년 9천686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매년 급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 범죄에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카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노린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급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지난해 705건에 달했다. 2년새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몰래카메라에 강간, 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지난해 9686건에 육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발달로 인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몰래카메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이자스민 의원,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분석



▲ 한강이남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에 보관 중인 몰카 증거품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대부분이다. ©이하나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20세 이하 몰카 성범죄는 이미 350건에 달한다.

여기에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세 이하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단위 : 건)

유형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월
총계	7,898	8,874	9,721	3,732
강간·강제추행	7,332	7,969	8,498	3,103
카메라 등 이용촬영	211	507	705	350
통신매체 이용 음란	355	398	483	246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3. 6. 19 개정법 시행		35	33

[人事청문회]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改名 추진"



船主협회 후원 출장 문제엔 "뒤늦게 알고 비용 반납했다"

김희정 <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기관명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꾸는 것을 (청와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기관명에 청소년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원금 문제와 해외 출장 등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작년 5월 선주(船主)들의 이익 단체인 한국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선주협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선주협회의 후원 사실을 알게 된 후 비용은 자진 반납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선주협회는 외항(外港)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 회사 모임이기 때문에 (내항을 오가는 업체가 저지른) 이번 (세월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6년간(2004~2008년, 2012~ 2014년) 자신의 지역구(부산 연제구)의 구청장·시의원 출마자 8명으로부터 76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공천(公薦)을 위한 대가성 후원금 아니냐"는 야당 측 질의에 대해선 "후원금에 대해선 적법하게 선관위에 신고했고, (기초단체) 공천은 제가 아니라 당 공천위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 2008년 가족에게 3억여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1000여만원만 갚을 것을 두고 제기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솔직히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이었다"면서도 "증여는 아니다"고 했다.

문화일보

2014년 08월 19일 화요일 009면 사회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사망

**이자스민 의원 자료
신체·정서·성학대 받아
올 8928건 신고...증가세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명의 아이들이 부모 등 어른들의 방임과 신체 및 정서 학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급히 아동학대 방지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실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이 중 4명은 1세 미만의 영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아동 중 5명은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등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받았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무려 2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 중 8명이 영아였다. 2012년에는 10명(영아 3명), 2011년에는 13명(영아 4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076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8928건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그 외 전북 755건, 경남·경북이 각 583건, 인천이 5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796명의 가해자 중 피해 아동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은 9.7%(660명),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한 경우는 5.5%(372명)에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시키는 '지속적인 관찰 처분'을 내린 경우가 76.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22명 중에서도 고소·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는 45.5%(1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9명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원진 기자 cworange@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아동 학대 안돼요' 촛불시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숨졌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천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928건이 신고됐다.

이 중 경기도가 2천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천122건, 전북 755건, 경상남·북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 9명 숨져"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아동학대로 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한 살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 만 146건, 2012년 만 943건, 지난해 만 3천 76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 928건이 신고됐습니다.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지난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1년 만 146건, 2012년 만 943건, 지난해 만 3천 76건, 그리고 올 상반기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 92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서울=뉴스】 우은식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9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숨졌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0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928건이 신고됐다.

이 중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 전북 755건, 경남·북이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올해 상반기에만 아동 9명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세계일보

2014년 08월 20일 수요일 013면 사회

피지도 못하고... 아동 학대로 상반기 9명 숨져

올 8928건 신고... 경기 2051건 최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아동 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이

자스민 의원이 1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이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만 벌

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목숨을 잃었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

30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928건이 신고됐다.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 전북 755건, 경남·경북이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 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 보호 전문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휴가철 안전사고 · 성범죄 ‘해수욕장’ 무방비로 노출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휴가철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사고와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성범죄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꼽혔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연간 2000건 가량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996건 발생했던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2012년 2266건에 이어 2013년 2197건이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최근 3년 동안 부산이 2702건으로 단연 많았다. 뒤를 이어 동해 837건, 태안 738건, 포항 339건, 속초 253건, 제주 226건, 인천·군산 2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해운대의 경우 연간 160~2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꼽혔다.

해수욕장 성범죄 역시 해운대가 가장 많았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자는 최근 3년간 54명(62%)으로 2011년 8명에서, 2012년 18명, 지난해 28명으로 늘고 있다. 올해 1~7월 발생한 해수욕장 성범죄자 5명 모두 해운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좀 환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무좀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무좀 진료를 받은 남성은 57만3천410명이며 여성은 64만6천449명으로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5월 무좀으로 진료받은 인원만을 살펴봐도 여성은 27만1479명(53%)이고, 남성은 24만436명(47%)이다.

연도별 무좀 환자는 여성이 2011년 64만856명, 2012년 64만1천494명이었으며 남성은 2011년 55만3천895명, 2012년 55만9천434명이었다.

전체 무좀 환자가 연간 120만명을 넘어가면서 무좀 환자 진료비도 증가했다. 무좀 진료비는 2011년 372억9천538만원, 2012년 385억4120만원, 지난해 394억7천01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여성들이 통풍이 잘 안 되는 스타킹, 하이힐 등을 즐겨 신는 경우가 많아 무좀 환자가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좀 예방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여름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는 제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좀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서울=뉴스】 강세훈 기자 = 일반적으로 무좀 환자는 남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성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에서 무좀 진료를 받은 남성은 57만3410명, 여성 환자는 64만6449명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7만3000여명 많은 것이다.

여성 무좀 환자가 많은 이유는 여성들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스타킹, 하이힐 등을 즐겨 신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주로 착용하고 외출 후 비누로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며 "가급적 발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여름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는 제품을 이용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좀 환자, 남성보다 여성이 7만3000명 더 많다”



무좀 환자는 군 복무중인 남성이나, 중년남성 등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성 무좀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무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은 남성보다 7만3000여 명이 더 많았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에서 무좀 진료를 받은 남성은 57만3410명, 여성 환자는 64만6449명이었다.

여성 무좀환자는 2010년 63만8451명, 2011년 64만856명, 2012년 64만1494명, 지난해 64만644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남성 무좀 환자는 2010년 54만8064명에서 2011년 55만3895명, 2012년 55만9434명, 지난해 57만3410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1~5월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무좀 환자 51만1915명 중 여성은 27만1479명(53%)이고, 남성 환자는 24만436명(47%)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이처럼 여성 무좀 환자가 많은 이유는 여성들이 꼭 끼는 하이힐이나 스타킹을 착용하기 때문이다. 하이힐과 스타킹을 신으면 발에 통풍이 잘되지 않아 땀이 많이 차게 되고, 이 때문에 무좀균이 활동하기 좋아진다는 것.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캠프에 참여 중이던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실시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은 빠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을 끝낸 이후라도 그 결과를 모르게 되면 이용자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한성·유승민·김희선·이완영·황인자·박인숙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공개 의무화 추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통해, 안전한 청소년 활동 보장돼야"

[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7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캠프에 참여 중이던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실시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은 빠져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와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을 끝낸 이후라도 그 결과를 모르게 되면 이용자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한성·유승민·김희선·이완영·황인자·박인숙·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자스민 의원 "교육기관 성희롱 매년 증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진정 사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2012년 228건에서 지난해 241건, 올해 8월까지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유형별로 민간부문을 제외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교육기관에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8월 20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남성의 숫자도 2012년 9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8월까지 1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의 피해자는 20대와 30대가 27.2%와 23%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청소년도 3.7%였다.

하지만 인권위가 성희롱을 인정한 인용률은 15%안팎으로 낮았고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843건 중 징계권고 등 조치를 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본법과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및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 "교육기관 성희롱 매년 증가 추세"

“ ‘성희롱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 확산돼야 ... ”

경남/아시아투데이 김옥빈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들의 성희롱 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사진)이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성희롱 진정사건 내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2012년 228건에서 지난해 241건, 올해 8월까지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기관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개인회사 등 민간부문을 제외할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8월까지 2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남성의 숫자도 2012년 9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8월까지 1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의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전체의 27.2%)와 30대(23.0%)가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청소년 피해 비율도 3.7%나 됐다.

성희롱 진정 건수는 늘고 있지만 인권위가 성희롱을 인정한 인용률은 15% 안팎으로 낮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843건의 진정 사건 중 ‘징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본법과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및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성매매 달미 '어글리 코리안', 작년만 500여명"

새누리 이자스민 "정부, 해외여행 중 성매매 근절에도 관심 가져야"



지난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검거된 내국인이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성매매를 하다 검거된 내국인은 2012년 274명에서 지난해 496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인원도 지난해 16명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19명에 달하는 내국인이 성매매 전력으로 여권발급을 제한 받고 있었다.

이 의원은 해외여행 중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제도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의 인권과 함께 해외여행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 동남아시아 여성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다 검거된 사람은 △2011년 2만6138명 △2012년 2만1107명 △2013년 2만1782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1만4608명이 성매매를 하다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 해외성매매 검거 현황

(출처: 경찰청,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유 형		
		성매매 알선 등	성매도	성매수
2011년	341	93	194	54
2012년	274	81	155	38
2013년	496	149	283	64
2014년 6월	125	45	58	22

내일신문

2014년 09월 16일 화요일
019면 정책

“학교내 성희롱 문제 심각”

인권위 진정사건중 기업 제외하면 1위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진정사건 내역’ 분석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2012년 228건에서 지난해 241건, 올해 8월까지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회사 등 기업을 제외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가 제일 높다는 점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2012년 21건, 2013년 26건, 2014년 8월까지 2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개인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다. 개인회사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37건, 2014년 8월까지 27건 등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률은 매년 100%에 가깝다. 2011년 99.1%, 2012년 99.7%, 2013년 99.9% 등이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평가시 반영 △미이행 사실 등에 관해 언론기관에 공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교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해 다른 강사들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성희롱 문제로 진정한 남성은 2012년 9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8월까지 15건으로 나타났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이자스민 "이주여성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사용" 추진

새누리 이자스민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보호시설 설치를 새로 규정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및 여성외국인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여성외국인근로자는 75.15%에 달한다. 성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도 30%나 됐다. 이들은 고립된 사업장 환경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임금·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범죄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성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특히 여성외국인근로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제도,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근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확대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 범죄라고 인지해야”

지난해 3160건 발생… 전체학대 30% 차지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지난해에만 3160건이 발생, 전체 아동학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서학대·성학대·방임 등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 가해자가 폭행과 체벌을 교육의 일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중상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건수는 3160건(30.9%)으로, 3843건(37.6%)이 발생한 정서학대 다음으로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을 촉발한 것도 칠곡 및 울산에서 발생한 신체학대 사건이었다.

특히 신체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행위 자체가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사랑’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신체학대를 당한 피해아동 가운데 반항·거짓말·도벽 등의 ‘적응·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42.4%, 주의산만·과잉행동·게임중독 등의 ‘정서·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32.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대 가해자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폭행을 훈육의 일종이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잦다.

또 신체학대는 아동의 중상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학대로 숨진 총 9명의 아동 가운데 5명이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등 중복 학대로, 1명은 신체학대만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소유욕과 체벌을 허용하는 한국의 그릇된 문화가 만나 발생하는 최악의 학대가 바로 신체학대”라며 “신체학대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체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14년 09월 30일 화요일 002면 종합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 범죄라고 인지해야”

지난해 3160건 발생 전체 학대 30% 차지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지난해에만 3160건이 발생, 전체 아동학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서학대·성학대·방임 등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 피해자가 폭행과 체벌을 교육의 일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증상

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건수는 3160건(30.9%)으로, 3843건(37.6%)이 발생한 정서학대 다음으로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발한 것도 질곡 및 울산에서 발생한 신체학대 사건이었다.

특히 신체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행위 자체가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사랑’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신체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가운데 반항·거짓말·도벽 등의 ‘적응·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42.4%, 주의산만·과잉행동·게임중독 등의 ‘정서·정신건

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32.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자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폭행을 훈육의 일종이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잦다.

또 신체학대는 아동의 증상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학대로 숨진 총 9명의 아동 가운데 5명이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등 중복 학대로, 1명은 신체학대만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소유욕과 체벌을 허용하는 한국의 그릇된 문화가 만나 발생하는 최악의 학대가 바로 신체학대”라며 “신체학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체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세계일보

2014년 10월 04일 토요일
009면 사회

비진학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업종별 근로실태

업종	시간당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적 있다	시간 외 임금을 못 받았지만 그냥 참고 일했다
24시간 편의점	4668원	41.6%	31.2%	57.1%
빵집	4687원	45.2%	28.6%	50.0%
패스트푸드점	4757원	77.3%	18.2%	37.5%
커피전문점	4987원	45.9%	24.3%	37.5%

자료: 고용노동부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패스트푸드·빵집·커피숍 4곳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41% 최저

세종=윤지희 기자

집 나간 아버지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는 A양(19)은 대학에 가는 대신 돈을 번다. A양은 시급 5210원, 즉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공고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A양은 근무 첫날 “시급은 3800원이고 원래 편의점들은 시급 제대로 쳐주는 곳이 없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유명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들에는 편의점 알바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넘친다. 약속한 것보다 더 일하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고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비진학청

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4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이 가장 나쁜 알바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만 14~23세의 고교·대학 비진학 청소년 가운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빵집,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4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근무시간은 49.5%가 오후 6시~밤 12시였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4750원으로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점은 가장 낮은 4668원, 빵집은 4687원, 패스트푸드점은 4757원이었고 커피전문점만이 4987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겼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편의점 비율이 41.6%로 4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비율(31.2%)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27.3%)이 가장 높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유명무실...강원·울산 인증받은 공공기관 0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형성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인증제도. 그러나 실제 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과 울산의 공공기관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인증을 받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등 대체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엔 522개로 4.94%, 중소기업은 144개로 0.0005%, 공공기관은 66.1%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해 매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인증 기준을 개정했지만 배점과 항목이 약간 달라졌을 뿐, 변화가 거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단 두 개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기업도 직원수나 규모면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규모면에서 천차만 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약한 만큼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강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조직 구성을 감안한 인증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브리핑]가족친화인증, 대상 기업·기관 0.02% 그쳐

대기업 참여율 4.93%·중소기업 참여율 0.005%...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인증기준 세분화해야"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기업
참여율이 저조
해 인증 기준
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 새누리

당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참여율은 4.94%, 중소기업 참여율은 0.005%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에게 따르면 전체 가족친화인증 대상 기업·기관 335만4615개 중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522개로 0.02%에 그쳤다.

대기업은 전체 2916개 기업 중 144개, 중소기업은 335만1404개 기업 중 183개만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공공기관은 전체 295개 기관 중 19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66.1%의 인증률을 보였다.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지방의 참여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이 0개, 울산은 중소기업 인증과 기관 인증이 0개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형성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업의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매년 언급되고 있다"며 "지난해 인증기준 개정도 배점과 항목이 좀 달라졌을 뿐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도 인원수나 규모면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도 규모면에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 구성을 감안한 인증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	522	181	146	195
서울	229	96	47	86
인천	15	2	5	8
경기	78	15	34	29
강원	10	2	8	0
충남	16	4	6	6
충북	9	3	2	4
대전	26	1	4	21
경북	16	3	9	4
대구	13	2	6	5
경남	47	40	5	2
부산	30	5	14	11
울산	4	4	0	0
광주	15	2	2	11
전북	3	1	1	1
전남	6	0	3	3
제주	5	1	0	4

2013년 지역별 가족친화인증현황(이자스민 의원실) © News1

문화일보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011면 사회

장애인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2년새 위반 과태료 부과 4.3배

시민 신고건수도 5.9배로

■ 해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늘어 지난 2년 새 과태료 부과 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만2191건이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2만8026건, 2013년 5만2940건으로 2년사이 4.3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에 의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신고 건수도 지난 2011년 1만3178건에서 2012년 3만9727건, 2013년 7만8193건으로 나타나 2년 전보다 5.9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지난 2011년 11억2646만 원에서 2012년 25억5192만 원, 2013년 47억2825만 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안전행정부가 도입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국민들의 신고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신호등 고장 신고 등 다양한 민원 신고를 받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3년 1만6976건을 기록하며 32.1%를 차지해 최다 위반 지자체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은 2011년 4195건으로 전체의 34.4%를 기록하며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3년 1만4820건으로 28%를 기록했고, 울산, 대구, 충북, 대전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신고로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기자 bigpaper@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매년 증가...지난해 과태료 2억

천영준 기자 = 충북도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만 2억원이 넘었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선 장애인 주차장의 불법 주차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233건에 불과했던 불법 주차 적발 건수가 2012년 1626건, 2013년 2587건으로 급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1배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44건에 달한다. 경기(1만6976건)와 서울(1만4820건), 울산(3583건), 대구(2174건)에 이어 전국적으로 5번째에 해당된다.

매년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 2011년 2339만원에서 2012년 1억3411만원, 2013년 2억59만원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키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 안전 '비상'

이자스민, 5곳 중 4곳 안전등급 최하

【에코저널=서울】 제주도에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원 5개 중 4개의 수련원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5개 중 4개의 수련원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크고 작게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관의 소홀한 관리로 여전히 청소년들의 안전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사후 철저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019면 정책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원 5곳중 4곳 안전에 문제

“여가부, 관리강화해야”

제주도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5곳 중 4곳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5개 중 4개의 수련원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받았다.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 시설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사후 철저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강조했다.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내년 4월에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안전 전담 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여성 근로자 성폭력 · 성희롱하는 가해자 88.9%는 ‘사장님’

[헤럴드경제=허연희 기자]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당하는 성폭력 · 성희롱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장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해 발표된 이주민방송 MNTV·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실태 조사한 내용을 통해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외면당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여성근로자들이 인종적 · 언어적 · 문화적, 법률적 장애와 차별로 인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2013년도 발표된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강간이 35.5%, 신체접촉이 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이 29%이고 매춘요구도 12.9%로 나타났다.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사장이 88.9%, 관리자 77.8%, 같은나라 근로자도 16.7%로 나왔다.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인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들이 갈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이나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을 찾지만 이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자스민 의원은 전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직장 등에서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 및 언어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의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여성 성희롱·성폭력 88.9%, 가해자는 ‘사장님’

이자스민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의원실 제공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성폭행하는 사람의 88.9%는 사업장 사장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주민방송 MNTV·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된 이 조사에서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10.7%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35.5%가 강간, 35.5%는 신체접촉, 29%는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접촉이었다. 특히 12.9%는 매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외국 여성 근로자에게 이 같은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이의 88.9%는 사업장 '사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자(77.8%)였다. 특이한 점은 문화가 같은 나라의 근로자가 가해한 경우도 16.7%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 및 언어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브리핑] 청소년문화의집,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 평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절실...지역 격차 해소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2013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83개소 중 절반이 넘는 113개소가 '보통 이하'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이 있다.

청소년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공시설 215개, 민간시설 4개로 총 219개가 운영 중이다. 2013년 평가 대상은 3년마다 한 번씩 종합평가를 받게 되는 공공시설 215개 중 183개소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 등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평가는 정체성과 기능, 정책지침 협력수준 등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청소년문화의집은 16개소(9%), 우수 등

급은 54개소(29%), 보통 등급은 93개소(51%), 미흡 등급은 17개소(9%), 매우 미흡 등급은 3개소(2%)로 보통 이하가 62%나 됐다.

또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은 평균 91.9%였으나 서울 지역은 69.7%로 지역별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가 점수는 서울이 8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역시 78.74점, 시 단위 75.89점, 군 단위 66.61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A등급 시설은 서울이 5개소, 광역시가 4개소 였으며 군 단위에서는 최우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등은 서울과 수도권이 평가 점수가 높은 반면 청소년 이용률은 낮았다. 군 지역은 평가 점수가 낮았으나 청소년이용률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방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등급이 보통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 이상의 시설로 이끌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학교밖 청소년상담사 이직 잦다

평균 근속기간 9개월 불과...청소년에 또다른 상처 우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상담하는 전담인력의 근속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꿈꿨던 마음이 열릴 만하면 전담인력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런 실태는 학교밖 청소년을 더욱 고립시키고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8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인 ‘두드림·해밀’ 사업의 전담인력 평균 근속기간이 지난 3년간(2011~2013년) 시·도센터의 경우 약 9개월, 시·군·구센터의 경우 약 8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청소년과 교감을 이뤄야 할 인력들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고 있는 셈이다.



‘두드림·해밀’ 사업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사업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복귀(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 사회진입(직업교육, 취업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두드림·해밀’은 미래의 문을 두드리며 맑게 개인 하늘을 연다라는 의미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고 친밀감을 나눴던 상담사 등 전담인력의 근속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은 단기간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이 힘든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한계를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두드림·해밀’ 사업에 근무한 총 직원의 47%가 퇴직했다. 직원 중 불과 8.6%만이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과 퇴직 사유로는 고용불안과 업무과중 등이 꼽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만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전담인력의 고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학교밖 청소년상담사 이직 잦다

평균 근속기간 9개월 불과
청소년에 또다른 상처 우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상담하는 전담인력의 근속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공공 달했던 마음이 열릴 만하면 전담인력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런 실태는 학교밖 청소년을 더욱 고립시키고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인 '두드림·해밀' 사업의 전담인력 평균 근속기간이 지난 3년간(2011~2013년) 시·도센터의 경우 약 9개월, 시·군·구센터의 경우 약 8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청소년과 교감을 이뤄야 할 인력들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고 있는 셈이다.

'두드림·해밀' 사업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사업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복귀(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고 등), 사회진입(직업교육, 취업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두드림·해밀'은 미래의 문을 두드리며 함께 개인 하늘을 연다라는 의미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고 친밀감을 나눴던 상담사 등 전담인력의 근속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은 단기간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이 힘든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한계를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두드림·해밀' 사업에 근무한 총 직원의 47%가 퇴직했다. 직원 중 불과 8.6%만이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과 퇴직 사유로는 고용불안과 업무과중 등이 꼽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만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전담인력의 고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자웅 기자/plato@heraldcorp.com

이자스민 "다문화센터 통합, 법·제도 정비 선행돼야 "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9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은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필리핀 출신 귀화 국회의원이인 이 의원은 여가부가 올해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를 위한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자료집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4쪽 분량의 자료집에서 두 센터의 운영현황을 비교하고 사각지대 없는 세부적 정책 대상자 설정,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강조한 뒤 "향후 계획 없이 기존과 같은 식으로 통합센터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초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방안에는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소외가족, 중도입국자녀 등을 포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외가족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재 시범사업은 다문화가정으로 한정,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센터의 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 통합 지원으로 중복·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센터를 통합할 때 "법적 근거나 위탁 체계가 다른 상황에선 실무자들에게 혼란이 생긴다"며 "여가부가 통합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내년에 50개로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므로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전체 통합을 목표로 그동안 예산과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일단 시범사업 형식으로 순차적 통합을 진행시킨 후 예산 일원화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2009년 발표된 병합형과 다기능센터의 기본 서비스를 2016년까지 기능전환 형태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외되는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로 확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성매매 검거...1년 새 81% 급증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하지만 해외 성매매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 성매매 검거 인원은 2012년 274명에서 이듬해 496명으로 81% 급증했다.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인원수도 2013년 16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9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에 주목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호주와 미국에 수행원을 각각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으로 인한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ODA 사업으로 현지 여성에게 직업 교육과 인신매매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국가와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인식교육에 대한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의 인권과 함께 해외 여행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 동남아시아 여성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